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차 례

1. 회의 개요
2. 주요 분야별 논의 결과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개요] 2023년 5월 19~21일 제48차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됨.
 - 참여국 정상들은 회의의 성과로 공동성명과 5개 분야별 개별성명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초청국 자격으로 '복합위기 대응(식량, 개발, 보건, 젠더)',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공동의 노력(기후 변화·에너지·환경)', '평화와 번영(지역정세, 국제질서 유지)' 등 총 3개 세션의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함.
- ▶ [주요 논의 결과] 제48차 정상회의에서는 ① 우크라이나 문제 ② 외교·안보 ③ 경제안보 ④ 디지털 ⑤ 기후변화·에너지·환경 ⑥ 복합위기 대응(식량, 보건, 개발, 젠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됨.
 - [우크라이나 문제] 7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면서, 제재 대상의 확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경고 및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 제한 등 신규 대러 제재를 결정함.
 - [외교·안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만, 인도·태평양 및 비핵화 등 지역정세·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핵군축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함.
 - [경제안보] 공급망 및 기간 인프라 강화,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경제적 외압에 대한 대응 강화(공동 대응을 위한 조정 플랫폼 설치), 중요·신흥 기술의 적절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디지털] 생성형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23년 중 생성형 AI의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결과물을 산출하기로 합의함.
 -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절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신규 목표들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
 - [복합위기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신흥국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보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 합의함. 또한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함.
- ▶ [평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참여국들은 중국에 대해 견제 의도를 드러내고 결속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기후변화·디지털 등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분명히 나타남. 또한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로 인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이전보다 커짐.
- ▶ [시사점] 우리나라는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G7의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석탄화력발전 부문 등에서 향후 좀 더 진전된 이행계획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G7의 공동 대응 및 핵심광물 공동개발 추진 등의 이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1. 회의 개요

■ 2023년 5월 19~21일 제48차 G7 정상회의가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견지', '신흥지역에 대한 관여 강화'라는 주제하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됨.

- G7(Group of Seven)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및 일본 등 주요 7개국 정상이 경제, 정치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임.
 - 러시아는 1998년 제24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이 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잠정적으로 정지당한 상태임.
 - EU는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 등 두 명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함.
- G7 정상회의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그해 의장직을 맡은 국가가 주도하여 사전 분야별 각료급(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상회의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번 48차 정상회의 이전에 10개 분야에서 각료급 회의가 개최됨.¹⁾
-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아 초청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총 3개 세션의 논의에 참여함.

■ 참여국 정상들은 회의의 성과로서 공동성명과 5개 분야별 개별성명 및 4개의 별도문서(부속서)를 발표함.

- G7 정상들은 외교·안보,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초청 8개국과의 확대정상회의에서는
 - ① 복합위기 대응(식량, 개발, 보건, 젠더) ②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공통의 노력(기후변화·에너지·환경)
 - ③ 평화와 번영(지역정세, 국제질서 유지 등)에 대해 논의함.²⁾
- 회담 이후 G7 국가들의 공동성명 및 우크라이나·핵군축·경제안보·식량 및 에너지 분야의 개별성명이 발표됨.

■ 이에 본고에서는 이번 제48차 G7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평가한 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분야별 논의 결과

■ 제48차 정상회의에서는 총 9개 세션에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본 절에서는 그중 회의 이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주목받은 의제인 ① 우크라이나 문제 ② 외교·안보 ③ 경제안보 ④ 디지털 ⑤ 기후변화·에너지·환경 ⑥ 복합위기 대응(식량, 보건, 개발)의 회의 결과를 소개함.

1) ① 기후·에너지·환경 ② 외교 ③ 통상(1차) ④ 농업(식량) ⑤ 노동·고용 ⑥ 디지털·기술 ⑦ 금융(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⑧ 과학기술 ⑨ 교육 ⑩ 보건 등 10개 분야에서 각료급 회의가 진행되었음.

2) 外務省(2023. 5. 20), 「G7 Hiroshima Leaders' Communiqué」.

가. 우크라이나

- G7 7개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모든 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함.³⁾
 -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모든 러시아군의 조건 없는 철수를 요구하고 벨라루스 등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명시함.
 - 한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5월 21일 G7 정상들과 회담하였는데, 회담에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외교, 재정,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데 합의함.
- 공동성명에는 ① 제재 대상 확대 ②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경고 ③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 제한 검토 등 새로운 대러 제재방침이 포함됨.
 -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러 수출제한 품목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중요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재 대상에 러시아의 전쟁에 필요한 제조, 건설, 수송 등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비즈니스, 용역 및 전쟁터에 물자를 수송하는 단체를 포함함.
 - 또한 제3국이 러시아의 침략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G7 차원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제3자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그에 더해 러시아에서 채굴, 가공 또는 생산된 다이아몬드의 거래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G7 국가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한편 공동성명 발표 후 G7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품목 수입 제한, 기업 추가 제재 등의 대러 제재안을 발표함(표 1 참고).⁴⁾

표 1. 정상회의 이후 G7 국가들의 추가 대러 제재(5. 21 기준)

국가	추가 제재안
미국	· 러시아 금 생산업체 폴리우스 및 폴리메탈의 러시아 사업 제재 ·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개인 22명 및 사업체 10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재무부) · 대러 수출업체 71곳을 수출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상무부) 등
캐나다	· 러시아 금 생산업체 폴리우스 및 폴리메탈의 러시아 사업 제재
영국	·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구리, 알루미늄 및 니켈 수입 금지
일본	· 대러 제재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개인, 단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 80여 곳으로의 수출 금지

자료: 日本經濟新聞, REUTER 등 보도자료 정리.

- 정상회의 전 개최된 각료급 회의에서는 전 품목의 대러 수출 제재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참가국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제재 확대 범위를 군수 관련 품목 및 개인·단체·사업으로 한정하고, 제3국 제재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임.

3) 外務省(2023. 5. 19), 「G7 Leaders' Statement on Ukraine」.

4) 「UK to ban Russian diamonds, US sanctions target major gold miners」(2023. 5. 20), 『REUTERS』 및 「政府、ロシアへ追加制裁 100の個人 団体資産凍結」(2023. 5. 20), 『日本經濟新聞』.

- 각료급 회의에서 미국은 G7 차원에서 농산물, 의약품을 제외한 전 품목의 대러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G7 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유럽 국가 및 일본이 실행 불가능함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⁵⁾
 - 일례로 일본의 경우,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사할린2'에서 러시아가 보복조치로 LNG 채굴 및 본국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우려함.

나. 외교·안보

■ G7 정상들은 외교·안보 세션에서 중국, 대만, 인도·태평양 및 비핵화 등 지역정세·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별도의 성명을 채택함.⁶⁾

- 각국 정상은 중국을 둘러싼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기로 함.
 -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내용을 통해 미루어볼 때, '중국을 둘러싼 제반문제'란 ①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②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 ③ 불법적인 기술이전 및 데이터 공개 ④ 경제적 강압 ⑤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 ⑥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상황 ⑦ 대만해협 ⑧ 강제노동 등인 것으로 보임.
-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정상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힘이나 강요로 현상(status quo)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의 내용을 확인함.
- 또한 정상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공유하면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언급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점을 확인함.
- 한편 핵군축을 둘러싸고 정상들은 NPT(핵확산 금지조약) 체제를 견지하고, 어떠한 국가도 일련의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개별성명을 발표함.

■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관련된 별도 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의장국인 일본이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남중국해 갈등 등 역내 안보 상황을 우려하여 참여국들과의 논의·조정 끝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30년 동안 약 39배 증가하였으며, 중국정부의 2023년 국방비는 전년대비 7.2%(약 1조 5,274억 위안) 증가함.⁷⁾
 - 일본에서는 중국이 불투명한 군사력 강화, 미사일 보유 증대 등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음.
- 공동성명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것", "경제적 강압을 가하지 않을 것" 등의 표현이 명시되었으며,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함.
- 한편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직접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한 것은 이번 48차 회의가 처음임.

5) 「対ロシア「全面禁輸」を米国提案、日欧は慎重・G7に差」(2023. 4. 25), 『日本経済新聞』.

6) 外務省(2023. 5. 19), 「G7 Leaders' Hiroshima Vision on Nuclear Disarmament」.

7) 단, 동 수치는 일본 방위백서에 언급된 수치로,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中国に「責任ある行動」要求 G7首脳共同声明で調整」(2023. 5. 3), 『日本経済新聞』.

다. 경제안보

■ G7 정상들은 ① 공급망 및 기간 인프라 강화 ②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경제적 외압에 대한 대응 강화 ③ 중요·신흥 기술의 적절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적 강인성 및 경제안보에 관한 G7 공동성명’ 및 ‘G7 클린에너지 경제 행동계획’을 채택함.⁸⁾

- [공급망·기간 인프라 강화] 참여국 정상들은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과 관련하여 G7 외 신흥국과도 협력하여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고, 공급망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 등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모바일, 위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인프라 등 디지털 분야에서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기술표준 등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비시장적 정책에 대한 대응 강화] 불투명한 산업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 비시장적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련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합의함.
 - 동 플랫폼에 참여국들은 G7 이외의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조기경보·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대항조치도 실시하기로 함.
- [중요·신흥 기술의 관리] 정상들은 중요·신흥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일련의 기술이 군사력 증강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상황에 따라 수출, 투자 및 기타 추가조치를 강구해나가기로 합의함.
- [클린에너지 경제 행동계획] 또한 정상들은 클린에너지 이행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물품·서비스를 공급망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 ‘클린에너지 경제 행동계획’을 발표함(표 2 참고).⁹⁾

표 2. ‘G7 클린에너지 경제 행동계획’ 중 경제안보 관련 항목

구분	주요 내용
강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정련 과정을 포함하여, 핵심광물 자원의 공급망을 견고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2023년 말까지 ‘RISE(강인하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재정, 공적 금융수단을 확보함(G7 국가 외에 신흥국, 개발도상국 등도 참여). · 중요 광물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 및 가공, 재활용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광물안전보장 파트너십(MSP)’을 통한 협력을 지속함.
클린에너지 물품, 서비스의 무역·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물품, 서비스 및 기술을 특정하고, 이들의 공급망 내에서의 생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G7 당사국간의 의견을 조정함. <p>예: 순환형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WTO 내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p>

자료: 外務省, 「G7 Clean Energy Economy Action Plan」.

■ ‘경제안보’가 G7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공식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이번 48차 정상회의가 처음이며, 이는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됨.

8) 外務省(2023. 5. 20), 「G7 Leaders’ Statement on Economic Resilience and Economic Security」 및 「G7 Clean Energy Economy Action Plan」(2023. 5. 20).

9) 클린에너지 관련 세부 내용은 기후변화 세션에서도 논의되었으나, 행동계획의 발표가 경제안보 세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본 절에서도 경제안보 세션 내 논의의 일환으로 소개함.

라. 디지털(생성형 AI)

■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규제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미국 비영리단체 Open AI가 2022년 12월 공개한 대화 전문 생성형 AI인 ‘ChatGPT’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이를 악용한 윤리적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생성형 AI의 활용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표 3 참고).
 - 생성형 AI는 입력된 명령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존에 축적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여 문장, 화상 이미지 등을 창출해내는 AI로서, ChatGPT는 메신저에 채팅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대화하듯 답변을 하는 방식의 생성형 AI임.
 - * ‘ChatGPT’는 2023년 3월 기준 전 세계 이용자가 2억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가짜 뉴스가 생성·배포될 가능성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 특히 G7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거짓 정보 발신,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¹⁰⁾

표 3. 주요 국가들의 AI 관련 규제 추진 현황

국가	규제 현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보호당국이 규제 관련 TF를 설치 · 새로운 AI 규제법을 검토하고 연내에 역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 * AI 리스크를 4단계로 구분(생성형 AI 등은 리스크가 높은 AI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높은 경우 공개 전 안전성 측면 등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 **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도 검토 · 기존 규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규정 · 다만 EU 내에서도 국가별 입장차가 존재함.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ChatGPT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슬로베니아 등은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에 신중한 입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에서 AI의 감사 및 평가 방식, 설명 책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 · 기존 규제: ‘AI 권리장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해 규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정책을 담당할 사령탑을 설치하고 ‘AI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취급 등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규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변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및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내용 금지

자료: 日本經濟新聞 등 보도자료 정리.

■ G7 정상들은 생성형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각료급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3년 중 생성형 AI의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결과물을 산출하기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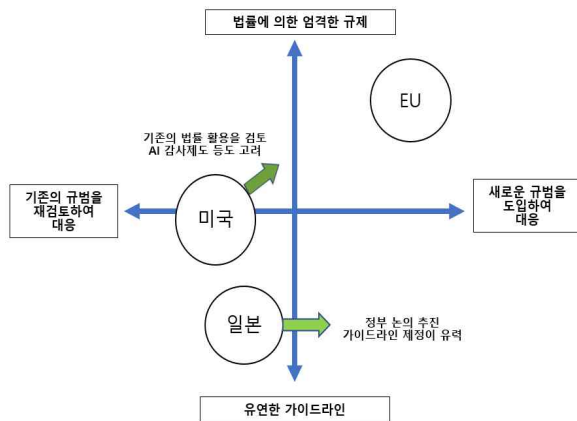
10) 일례로 독일의 폴커 위싱 디지털부장관은 닷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는 러시아가 AI 기술을 사용하여 거짓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럽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명한 바 있음. 「生成AI「革新阻まぬ規制を」独・仏デジタル相に聞く」(2023. 4. 28), 『日本經濟新聞』 및 「G7、中ロのAI「悪用」警戒・異なる立場、緩やかな連携めざすデジタル相会合、開幕」(2023. 4. 30), 『朝日新聞』.

- 각료급 회의에서는 ① 공통의 척도로 AI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표준 제정 지원 ② G7 차원에서 규제에 대한 각국의 견해 조정 등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에 합의하고, AI를 포함하여 신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5대 원칙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함.¹¹⁾
 - 5대 원칙은 ① 법의 지배 ② 적절한 절차 ③ 혁신 기회의 활용 ④ 민주주의 ⑤ 인권존중임.
- 이를 토대로 G7 정상들은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추후 각료급 논의를 통해 규범 제정 등의 결과를 내는 방안에 의견을 모음.

■ 그러나 G7 각국은 규제 방식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등 큰 틀에서의 합의만 도출함.

- 각료급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①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의 연내 합의 ② AI가 만든 작품에 'Made with AI' 등의 라벨 표시 ③ AI의 판단기준에 대한 기업의 설명 의무 부과 ④ 경쟁정책 관점에서 규제 고려 ⑤ G7 차원에서 제정하고 각국이 협조하는 규제 제정 등을 제안함.¹²⁾¹³⁾
- 그러나 미국은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은 법률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참여국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그림 1 참고).
 - 다만 미국 바이든 정부는 "(AI와 관련하여) 적절한 가이드레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무부가 AI 감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각료급 회의 후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AI 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책임 있는 AI'라는 총론 수준의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됨(표 4 참고).

그림 1. 생성형 AI의 규범을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



자료: 日本經濟新聞 등을 토대로 재구성.

표 4. 생성형 AI 관련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책임 있는 AI와 AI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관련 정책, 규제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할 것 · 인간중심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 · 국제기구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기술표준의 채택을 촉진할 것 · G7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생성형 AI 관련 과제를 신속히 파악
신용기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기회의 활용', '법의 지배', '적절한 절차', '민주주의', '인권존중' 등 5대 원칙을 AI 관련 정책 추진에 준용할 것

자료: 外務省, デジタル庁 등 보도자료 종합.

11) デジタル庁(2023. 4. 30), 「Ministerial Declaration The G7 Digital and Tech Ministers' Meeting」.

12) 「EU, 生成AIに統一規制論 「メード・ウィズAI」表示案も」(2023. 4. 26), 『日本經濟新聞』.

13) 특히 EU는 AI와 관련된 법안을 2021년부터 준비해왔는데, 유럽위원회 베스티어 상급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4월 24일 닷케이와의 인터뷰에서 ChatGPT 등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EU 전체 차원에서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2023년 후반에 유럽의회와 장관급 이사회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여 시행하고 싶다"는 의지도 표명함. 베스티어 상급부위원장은 AI가 만든 제작물에 'Made with AI' 등의 라벨을 표시하는 방안과 같은 규제안을 제시함.

마. 기후변화·에너지·환경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G7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및 기타 지역의 국가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세션에서는 G7 정상 외에 초청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함.
- 참여국 정상들은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축,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신규 목표들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
 - [기후변화] 정상들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등 기존 선언들을 재확인함. 또한 G7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0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매년 진척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에 합의함.
 -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온실가스의 세계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3%, 2035년까지 약 60% 줄이고, 2050년에는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임.
 -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이 공동성명에 포함됨. 또한 주요국 정상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G7 국가들이 광산개발을 위해 13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함.
 - [환경] 정상들은 2040년까지 '추가적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제로로 한다'는 새로운 목표에 합의함.
 - '2040년에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을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는 2019년 G20 정상회의 때 합의된 '2050년'이라는 목표시기를 10년 정도 앞당긴 것임.

표 5.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관련 G7의 주요 합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에 COP28 개최 시기까지 “2025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요청 · 온실가스 배출 삭감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요청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국가들이 협조하여 이행하는 ‘핵심광물 안보를 위한 5포인트 플랜’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자원·공급망 개발에 관한 공동투자 추진 -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중요광물을 회수하는 리사이클 추진 등 · 산업별·부문별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목표 확인, 신규 목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35년까지 2000년 대비 절감 이하로 감축 -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증대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비용 절감을 도모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략적 외래종 대책 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G7 워크숍 개최) · 순환경제 등에 관한 기업 행동지침을 규정한 ‘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성의 원칙’ 채택 · ‘추가적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제로’ 목표의 달성 시기 단축(2040년)

자료: 環境省, 「G7札幌 気候・エネルギー・環境大臣会合 結果概要」.

바. 복합위기 대응

■ G7 정상들과 초청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식량, 보건, 개발 등의 분야에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연대하여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함.

- [식량] 참가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신흥국에 대한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의 농업부문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합의함.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식료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국에서의 인프라 정비 및 기술이전 등 중장기적인 지원도 진행하기로 함.
- [보건] 세계 각지의 백신 제조능력, 팬데믹 기금, 팬데믹 대응 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적 문서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보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 합의함.
- [개발] G7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¹⁴하에 중·저소득 국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국제개발금융기관(MDBs)의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방침을 확인함.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함.

■ 식량 분야에서 G7 및 초청국이 포함된 개별성명이 별도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신흥국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G7 국가들이 동참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¹⁵

-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 이전부터 '신흥국이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에 공헌하고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반복해서 주장함.¹⁶
- '복합위기 대응' 세션 논의 후 발표된 '강인한 글로벌 식량안전 보장에 관한 히로시마 행동성명'에는 G7 국가 및 초청된 8개국 정상들의 ① 현재의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② 장래의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 및 예방 ③ 모든 사람을 위한 식량안보의 실현 등을 위한 공동의 의지가 명시됨.¹⁷

3.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참여국들은 결속,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14)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G7 국가들이 2022년 발족한 파트너십으로, △삶의 질 향상 △공급망 강화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제공 등을 도모함. G7 국가들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ICT 네트워크 및 인프라, 보건 시스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15) 「G7広島サミット 食料安全保障に関する声明案 明らかに」(2023. 5. 23), 『NHK NEWS WEB』.

16) 「グローバルサウスと連携狙う 首相がアフリカ4ヶ国歴訪、背景に中口も」(2023. 4. 29), 『朝日新聞』.

17) 外務省(2023. 5. 20), 「Hiroshima Action Statement for Resilient Global Food Security」.

-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지역정세' 항목에 중국과 관련한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고 ①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축소 ②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③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④ 중국의 일련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반대 등에 대해 참여국들이 강하게 결속한다는 의지를 표명함.

■ 그러나 기후변화 및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일부 이슈들과 관련하여 미국·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입장차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참여국들의 의견 조율 여부가 주목됨.

- 2022년 G7 정상회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료급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는 공동성명에 '석탄화력 발전의 폐지 시기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의 거부로 '단계적 폐지'라는 표현으로 변경됨. 또한 참여국들은 일본의 암모니아 사용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짐.¹⁸⁾
 -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30년 일본의 에너지 수급 중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약 19%일 것으로 전망함.¹⁹⁾
 - 암모니아만 태우는 '전소'라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지만, 일본에서 '전소'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40년 이후임. 그동안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혼소'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혼소는 탈탄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비판의 대상임.
- 생성형 AI 규제를 둘러싸고 참여국들은 '연내 가이드라인 책정'이 목표지만, 규제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 있어서 EU와 미국, 일본의 입장차가 명확하여 목표 시기까지의 입장 조율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일본은 정상회의 전 각료급 회의 등 사전 조정단계에서 'AI 규범은 가이드라인을 축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EU 국가들이 '유럽 내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²⁰⁾

■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하고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는 등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 소지가 이전보다 커짐.

- 공동성명에는 "참여국들은 G7의 파트너로서 결속한다"는 취지와 함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이 명시됨.
- 외교 분야 사전 각료급 회의 결과가 공개된 직후인 4월 28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중일 관계가 중대 기로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인 5월 21일 쑨웨이둥 중국 외무차관이 타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 항의함.²¹⁾
- 일본 기사다 총리는 한국 외에도 코모로, 인도, 브라질, 쿡제도 등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정상들을 초청하였는데, 이는 신흥국이 직면한 문제에 G7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 국가들에 대한 관여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됨(그림 2 참고).²²⁾

18) 「脱石炭で対立 孤立化の恐れ」(2023. 4. 21), 『産経新聞』.

19) 経済産業省(2022), 「2030年度におけるエネルギー需給の見通し」, p. 2.

20) 「G7, AIのルール具体化で溝 各論より結束優先EU、法律で厳格に規制/日米、柔軟な対応求める」(2023. 5. 1), 『日本経済新聞』.

21) 「新駐日中国大使「日中関係は重大な岐路に」, 『産経新聞』, (2023. 4. 29). 「中国, G7声明に抗議 日本大使が反論「言及当然」(2023. 5. 23), 『産経新聞』.

22) 「G7サミット、同志国・地域代表に照準、印豪など8カ国招待 日本は安保戦略と連動、食料・エネなど議論へ」(2023. 4. 30), 『日本経済新聞』.

그림 2. 제48차 G7 정상회의 초청국과 일본의 관계



자료: 日本經濟新聞을 토대로 재구성.

■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참여를 통해 식량,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차원의 과제들에 동참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논의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를 표명함.²³⁾

- 윤석열 대통령은 ‘복합위기 대응’ 세션에서 식량위기 국가에 대한 식량지원 규모를 연간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늘리고,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²⁴⁾로 아프리카 7개국에 쌀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또한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세션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자원 마련 차원에서 ‘그린 공적개발원조²⁵⁾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²⁶⁾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나. 시사점

■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G7 개별 국가 차원의 AI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EU는 2024년에 AI 규제법 도입을 목표로 이미 상당히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미국·일본도 정상회의의 전후 자국 내 의견수렴 등의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목표 시기인 2023년 말까지 이번 정상회의 때보다는 일정 수준의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EU와 일본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 EU가 준비하고 있는 역내 규제안 수준의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며, EU에서 제시한 규제안의 일부를 일본이 수용하는 형태 혹은 양측의 타협점 도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 5. 21), 「윤 대통령, G7 정상외교 마무리…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다졌다」.

24) ‘K-라이스벨트’는 서아프리카(세네갈, 감비아, 기니, 가나), 중앙아프리카(카메룬), 동아프리카(케냐, 우간다) 7개국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쌀 생산벨트로서, 농업 분야 ODA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을 의결함.

25) ‘그린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로서,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린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명시한 바 있음.

26) ‘기후클럽’은 2022년 다보스포럼에서 독일 쉘츠 총리가 발표함, G7 주도의 기후변화 협의체로서, 탄소가격책정 등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는 2023년 4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AI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AI 관련 규제는 아직까지 부재함.²⁷⁾
- G7 차원에서 규제가 마련될 경우, 이들 국가에서 AI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세부 이행 및 논의들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 부문 등에서 향후 좀 더 진전된 이행계획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음.

- 참여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에 COP28(23. 11 예정)개최까지 ‘2025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타 국가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결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결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가동연수 30년 이상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전제로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명시됨.²⁸⁾
 -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관련하여 “가동연수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 28기 폐지 및 LNG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중간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입에 대한 공동 대응’, ‘핵심광물의 공동 개발 추진’ 등은 향후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논의 결과의 후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탈중국’을 위한 공급망 강화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자국 우선주의적 산업정책을 취하고 있음.
 - 일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지원 대상은 미국 제조업체 위주로 되어 있으며, EU도 희토류 등 중요물자와 관련하여 연간 소비량의 최소 40%를 역내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표함.
-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정책에 대한 주요국들의 공동 대응, 핵심광물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공동 재정 지원 등은 주요국들의 협력을 시사하여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를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행 여부가 주목됨.²⁹⁾ KIEP

27) 관계부처 합동(2023. 4. 14),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28) 관계부처 합동(2023. 4),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9) 「「分断」の中で：G7広島サミット・重要鉱物「脱中国」加速」(2023. 5. 16), 『毎日新聞』.